



산업자원부

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

2006. 10

산 업 자 원 부
산 업 연 구 원

목 차

I. 추진배경	1
II. FDI유치 현황과 여건	2
III. FDI정책의 성과 평가	5
VI. FDI 증장기 비전(안)	12
V. 비전실현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7

I. 추진배경

□ 대내외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변화에 대응

- 설비투자 부진 및 낮은 성장률 극복, 고용창출,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 국가적 정책과제 실현에 적극적 동참
 - 또한,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추진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처
 - * 설비투자 증가율(%) : ('91~'97)8.4 → ('01~'04) 0.3
- 글로벌 FDI의 증가추세하에서도 중국, 영국 등 FDI의 일부 국가 편중에 따른 우리나라 FDI 유치의 활로 모색
 - * 전세계 FDI 중 중국 비중 : ('00) 2.9% → ('05) 5.4%
 - * '02~'04년간 동아시아 R&D센터 유치 885건중 723건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

□ 우리나라 FDI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방향 정립

- 최근 FDI는 연간 110억불(신고기준) 이상으로 '02~'03년의 정체에서는 회복되었으나, 전세계 FDI중 우리나라 위치는 미약
 - * FDI순유입 순위 : 21위(OECD, '05), FDI누계의 GDP 비중 : 8.0%(전세계 21.7%)
- 외환보유고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투기성 외국인자본유입 논란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常存
 - FDI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고용·성장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 국내유입 FDI 특성변화와 경제정책과의 연계 강화 필요

국내외 환경변화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기대를 반영해 중장기 외국인투자정책비전을 마련

II. FDI유치 현황과 여건

□ 외환위기이후 FDI 유입규모 급증

- '97년말 FDI 총액(현존기준)은 132억달러(도착기준)에 불과했으나, '05년말에는 536억달러로 증가(405억달러 증가)

(단위: 십억 달러)

	1997말(stock)			1998-05(flow)			2005말(stock)	
	유입	감소	현존	유입	감소	순증	총유입	현존
신고기준	24.6	-	-	86.8	-	-	111.3	-
도착기준	16.3	3.2	13.2	56.9	16.4	40.5	73.2	53.6

- '98년 이후 FDI는 주로 금융·보험, 전자, 도소매, 산업서비스, 통신, 자동차의 순으로 유입되었으며, 제조업이 39.9%(161억달러)

-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화학), 서비스업은 취약분야(금융·보험, 도·소매)에 집중

- 국별로는 미국·네덜란드·일본·영국이 주요 투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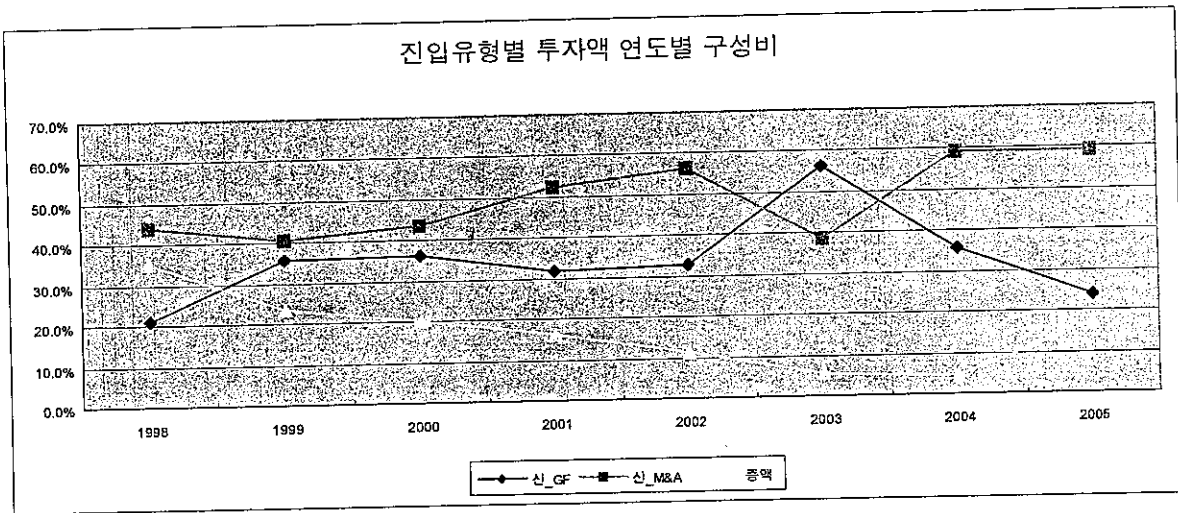
* FDI 순유입규모('98~'05, 억불) : 미국 82, 네덜란드 69, 일본 57, 영국 50

- 미국과 영국은 금융보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일본은 전자산업에 주로 투자

- '98년 이후 FDI는 그린필드형과 M&A형이 각각 50.1%, 49.9%로 동일한 비중

- 다만, '04년과 '05년에는 M&A형 FDI가 크게 증가한 반면, 그린필드형 FDI의 증가규모가 크지 않아 M&A비중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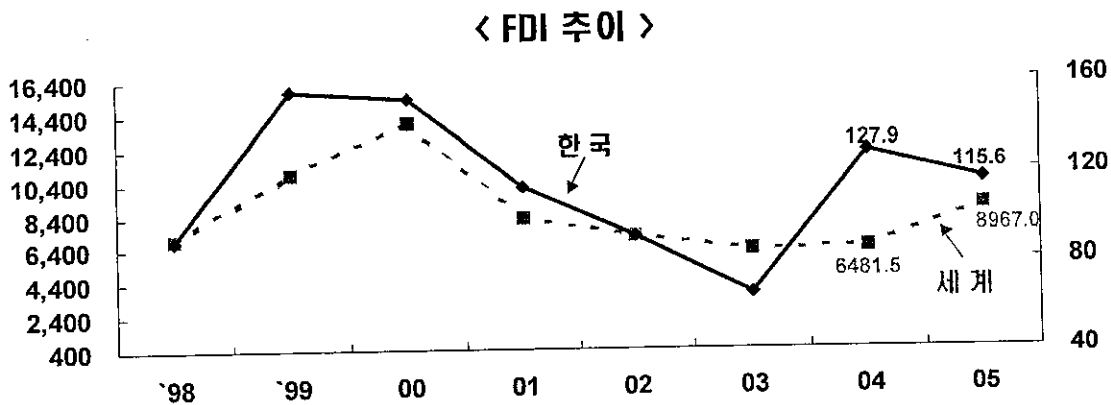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투자는 주로 금융보험업, 제조업, 도소매업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등이 증가하는 추세



- '00년 이후 위축되었던 세계 FDI는 M&A형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6,500억불('04)에서 8,967억불('05)로 증가

- 금년 들어서도 금융시장 동향에 보다 민감한 M&A형 FDI가 세계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 '06년 상반기 전세계 M&A 규모는 1.9조불로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출처 : Dealogic)



(단위) 억불, (출처) UNCTAD

□ FDI총액은 수도권에 집중, 제조업분야는 수도권편중 완화

- '62년이래 총 FDI는 서울 50.8%, 경기 13.8% 등 수도권에 67.6%가 집중
 - 외환위기 이후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의 투자 활성화로 수도권 비중이 71.0%('98~'05 누계)로 더욱 심화되는 추세
 - 다만, 충남·북지역은 최근 반도체, LCD,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 기반 확충에 힘입어 FDI가 확대되는 경향
- 제조업의 70%내외를 차지하는 부품·소재분야의 경우에는 '98년 이후 수도권 집중도가 33.7%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강원, 광주, 전북, 전남지역 등 산업·교통 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FDI가 여전히 미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부상과 FDI의 위축

- 뉴브리지, 론스타, 소버린 등의 고이익 창출과 적대적 M&A 위협 등으로 '투기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M&A형 투자로 진입한 외국인투자도 대부분 지속적 경영활동으로 긍정적 경제효과를 창출하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
 - * 그린필드투자기업의 증액투자비율이 20.6%인데 비해 M&A기업은 21.8%
- 외국인투자자들은 투기성 외국인투자에 대한 비판이 반외자 정서로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
 - 외투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개선해야 투자환경으로 '국민의식의 국제화' 항목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IK, '05)
 - * 국제화 항목 비중 : ('03) 17% → ('04) 32% → ('05) 42%

Ⅲ. FDI 유치정책의 성과 평가

1. 긍정적 평가

□ 유동성확보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의 중추적 역할

- '98년이후 FDI 순유입 규모가 405억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가 외환보유고 세계 4위의 견실한 경제로 복귀하는데 기여
 - FDI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M&A시장개방,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 등 신속히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 참여정부이후에는 내수부진, 양극화, 설비투자부진 등의 당면 과제 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고용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중 수출비율은 24.1%로 국내산업 평균인 22.4%보다 높은 수준으로 무역확대에 기여
 - 국가경제에서 매출 및 고용 제고 등에서도 큰 기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

	2000*	2001*	2003	2004
매출	13.0%(73.5조원)	14.8%(86.6조원)	11.6%(115조원)	14.5%(157조원)
고용	7.3%(19.3만명)	8.3%(21.9만명)	6.6%(27.5만명)	6.2%(28만명)
무역	수출 227억불 수입 222억불 무역수지 5억불	수출 232억불 수입 241억불 무역수지 △9억불	수출 278억불 수입 246억불 무역수지 32억불	수출 518억불 수입 526억불 무역수지 △8억불

* 2000년과 2001년도 매출, 고용 자료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함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 * 사례 : 충청북도 반도체 등 전자부품, 강원도 의료기기 등
- '00~'06.6월까지 고도기술을 수반한 FDI는 413건 82억불을 기록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 투자유입의 확대로 경제 체질개선 기대

- 신서비스산업의 대표업종인 사업서비스업(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운수·창고업, 문화오락 등의 성장세 확대
 -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성장세 둔화
- 일부 서비스산업은 경쟁력 제고로 중국 등 개도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에 대응한 능력이 제고

< 주요 서비스 분야 FDI 구성비 추이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금융보험업	9.8	18.0	23.4	19.0	25.3	30.1	33.8	41.6	26.5
도소매업	13.7	7.8	8.5	14.0	12.2	9.2	9.7	9.3	10.0
사업서비스업	1.9	4.6	8.1	5.4	7.9	3.5	4.4	7.8	5.7
운수·창고업	0.1	0.3	0.2	0.5	10.1	3.4	3.5	4.3	2.5
문화·오락	0.1	0.4	0.6	2.1	1.0	0.3	1.7	2.1	1.1

* 연간 FDI중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 지속적인 투자환경개선으로 외국인의 만족도 제고

- 151개 개선과제 추진결과 생활환경 만족도 개선
 - * '04년 27.4%에서 '06년 37.4%로 제고(불만족도: 27.8%→ 25.7%)
- 특히, 외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환경이 서울용산국제학교('06.8), 경기수원외국인학교('06.9)의 개교 등으로 실질적으로 개선
 - * 생활환경 중요도('06) : 교육 → 주거 → 교통 → 의료 → 출입국/비자

2. 부정적 평가

□ 외환위기 이후 FDI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경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는 아직 미흡

○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외투기업 기여도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

(단위 : %)

구 분	'02~'04 경영성과*		제조업중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외투기업	국내기업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 출	13.0	8.1	11.6	79.5	36.1	35.9	24.4	2.6
고 용	2.9	0.9	8.5	49.2	20.4	30.8	16.6	-
부가가치	10.7	2.1	11.1	86.7	26.8	35.8	-	-

* 우리나라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연평균 증가율

** OECD기준, 한국은 KIET 조사결과('06.3, '04년 기준)

○ FDI 누계가 GDP중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8.1%인데 반해, 주변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은 각각 150.2, 277.6%

□ 외국인투자기업을 활용한 산업고도화 전략 강화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내기업과의 연계제고 필요

-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R&D 집약도가 저조하며, 국내 조달비율이 국내기업보다 낮음

* R&D집약도 : (국내기업) 1.9 VS (외투기업) 1.4

* 국내조달비율 : (국내기업) 87.5% VS (외투기업) 76.5%

○ 정책목표 및 수단이 양적 측면의 FDI의 유치에 치우쳐, 유치이후 고용창출·지역경제 기여 등 유도에는 미진

- 고용창출, R&D활동, 국내기업·연구주체와의 협력활동 증진 등을 위한 시책의 마련·추진 필요

□ 주변국의 FDI유치 경쟁력 강화, 반외자정서의 부상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 부족

- FDI유치정책은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을 유지(국가목표와 연계 미흡, 신축성 부족 등)
- 싱가포르, 대만 등 주변경쟁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의 유효성 논란으로 FDI 위축 우려
 - * 사례 : ASML(반도체장비, 대만), GSK(백신, 싱가포르) 등 주변국 선회
- 노사·의료·경쟁·조세·규제·반기업정서, 외국어 사용 등 근본적 투자환경 개선 지연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한계
 - 정부정책의 일관성, 행정규제의 투명성 논란도 계속
 - * 외국인투자환경 경쟁력(EIU, '06) : ('01~'05) 25위 → ('06~'10) 26위
 - * 경쟁국 투자환경 순위(EIU) : 싱가포르 3위, 홍콩 9위, 대만 19위

□ 제한된 범위의 FDI정책 추진으로 정책효과 제한

- FDI 유치정책을 주로 제조업 분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 * 외국인투자유치 목표('05) : FDI 110억불, 고부가가치 FDI 25억불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개편 등 FDI를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 미흡
 - 금융, 물류분야의 FDI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등 동북아허브 경쟁국에 비해서는 부족
 - * 금융 FDI('04, 현존 증가규모) : 한국 27.6억불, 싱가포르 80.6억불

외국인투자정책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①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구 분	모 습
유치업종	<p>◇ 제조업 → 서비스업</p> <p>* FDI중 제조업비중 : ('98~'00) 57.8 → ('03~'05) 33.7</p>
투자형태	<p>◇ 신규투자 → 증액투자</p> <p>* 증액투자비중 : ('98~'00) 49.0 → ('03~'05) 55.7</p>
투자유형	<p>◇ 그린필드투자 → M&A투자</p> <p>* M&A투자비중 : ('98~'00) 33.0 → ('03~'05) 46.7</p>
균형발전	<p>◇ 수도권집중 심화</p> <p>* 수도권비중 : ('98~'00) 59.6 → ('03~'05) 78.0</p> <p>* 부품소재분야 수도권비중 : ('98~'00) 35.2 → ('03~'05) 32.9</p>
동북아 경제중심	<p>◇ 허브관련 FDI유치 가시적 효과 미흡</p> <p>* 물류 FDI비중 : ('98~'00) 1.5 → ('03~'05) 2.8</p>

② 외국인투자정책의 평가와 향후 역점과제

구 분	현 재	향후 과제
외국인 투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경영·생활 환경 증장기 개선과제」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개 중 86개 완료 ◆ 외국인투자자의 근본적 요구에는 미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행정투명성, 금융 규제 등 개선요구 지속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형 통상국가의 조기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의 FTA추진으로 국내제도 등 선진화 ◇ 노동·행정규제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추진
업종별 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과 연계한 유치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등 제조업 FDI의 질적 고도화 - 현금지원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의 다양화 ◆ 동북아허브구축 기여 서비스업 유치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시장 취약 - 인센티브 제도가 제조업에 치중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유치 타겟업종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점 유치업종 선정 - 서비스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 유치기업의 협력·연계형 경제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사슬단계별 국내기업과의 연계 유도

구 분	현 재	향후 역점과제
FDI 정책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유치확대를 위한 종합방안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Z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등 ◆ 정책효과 가시화 시점 미도래 ◆ IK 등 유치기관의 분산과 수요자맞춤형 FDI지원제도 미흡 	정책의 일관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신속·안정적 추진 ◇ 정책목표·철학을 반영한 과감한 투자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Z,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규제 및 인센티브 재검토
FDI 유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투자 활성화 - M&A기업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속 	철저한 고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업의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투자가와의 신뢰 제고 및 FDI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분야 FDI의 수도권 편중 완화 ◆ 서비스업의 수도권 편중 심화 ◆ FDI의 지역균형을 위한 산업기반 부족 	지역간 협력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산업기반 조기 구축 ◇ 권역별 차별화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 지원제도 확충, 수도권은 규제 철폐

IV. FDI 중장기 비전(안)

1. FDI 정책의 기본방향

2015년 FDI 비전

FDI 유치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 산업선진화가 구현된 선진통상국가 실현

참여정부 FDI 비전

보완

목표

1. 성장잠재력 확충

+

2. 양질의 고용창출
3. 지역균형발전

전략

2. 4대 유망업종의
전략적 유치

+

1. 유차기업의 입지선택기회 확충
및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3. 동북아허브기여 업종
발굴·유치

정책
방향

- 유치업종 타겟팅
- 인센티브 확충
- 투자환경 개선

- 1. 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 2.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강화
- 3. 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 4. 외투정책의 효율성 제고

패러
다임

- .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리경제의 동반자로서 인식
- . 실현된 효과 위주로 외국인투자정책 성과 평가

2. 주요 정책과제

1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 선진국과의 FTA추진 확대로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
 - 서비스산업의 개방 등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경쟁 촉진 및 시장 형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기반 조성
 - 글로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금융·노사·경쟁 등 제도 및 관행 개선
- 「외국인투자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책」의 보완
 - '04년 이래 추진한 경영·생활환경 개선의 성과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평가
 - 개선효과가 특히 미진한 외국어, 교통, 공정거래 등의 근본적인 개선과제 도출
 -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상의 중심, 정부가 참여하는 「투자환경 개선 T/F」 구성·가동
- 우리경제의 글로벌화, 선진문화의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한 홍보 강화
 - 국가 이미지 제고, 외국인투자의 성공 및 실패사례,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 지속적 전개
 - 외국인투자자·기업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행사 개최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

- 개별제도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유치협상 담당관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 부여
- 인센티브 Pool제를 도입하여 유치 효과, 외국인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해 다수의 인센티브를 중복·선택 가능하게 운영

□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책임행정을 위한 체계 개편

-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IK(Invest KOREA)의 기능 및 조직 강화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유치지원제도 운용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 실현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시 IK 권한을 대폭 강화

* IK 사업실적은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국회에 매년 종합 보고

□ 외국인투자 유치시스템의 고도화

-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보, 중국·일본 등 유치경쟁 국가들의 투자유치 기업 정보 등을 DB화하고 추이 분석
- 동향정보 DB를 토대로 유치목적과 유치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타게팅 방법론 강화

□ 산업비전 등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한 유치분야 선정

- 국내산업 여건과 발전방향, 향후 중국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 수요 전망 등을 반영, 성장동력분야와 서비스산업 유치 강화
- FDI와 우리기업 해외직접투자(ODI)를 연계한 투자유치전략 수행

□ FDI를 지역균형발전, 산업구조고도화에 적극 활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으로 입지를 위해 투자장려지역의 인센티브 대폭 강화
 - * 투자장려지역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인센티브 지원
 - 투자장려지역의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방이전 제도중 금융지원 및 보조금지원제도의 적용도 검토
 -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50억원까지 국비지원

□ 미, EU 등 FTA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치전략 수립

- 한미 FTA 이후 양국간 경제적 유대 강화 등 긍정적인 투자 여건을 활용, 미국의 투자유치 강화
 - 취약산업인 우주항공·정밀기기 등 분야 미국기업 유치활동 강화
-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전자 등의 분야는 교역 확대를 활용, 일본 및 EU로부터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외국인투자 '유입'과 '유치'를 구분하여 관리

-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투자와 M&A 등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2가지로 구분 가능
 - 정부는 정책결과로 조정이 가능한 '유치'에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유치 역량 집중
 -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유입'은 외국인투자자가 우리나라를 기피하지 않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
- FDI의 실적관리와 성과측정을 도착기준 및 순유입기준 등 실현된 FDI를 기준으로 실시해 정확한 국민경제 효과 발표 및 검증

* (현재) 신고기준 → (개선) 도착 · 순유입기준

□ 외국인투자의 국가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

- 인센티브지원요건에 유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국내에서의 경영실적, 국내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추가 · 보완
 - 인센티브 지원후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점검시스템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 판로개척, R&D 등 국내 지원사업의 연계와 같은 사후지원을 강화해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 공동 R&D추진시 우선 지원 등 협력 네트워크 분위기 활성화

V. 비전실현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비전실현의 기대효과

□ FDI 유입규모를 추세보다 10% 제고

- 2015년의 FDI의 GDP중 비중 : (당초) 13.9% → (변경) 15%

* 추가 유치규모('06~'15) : 200~250억불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 고용 16%, 매출 24%(독일수준)

* 고용 : ('04) 6.2% → ('15) 16% , 매출 : ('04) 14.5% → ('15) 24%

□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기업 R&D중 외투기업 비중 : ('05) na → ('15) 20%(매출비중기준)

- 제조업중 부품소재 비중 : (현재) 67% → ('15) 70%

- 사업서비스업의 FDI중 비중 : (현재) 5.7% → ('15) 10.5%

2. 향후 추진계획

- 기자브리핑(10.12)

- 세부시책의 수립·추진('06.10월 이후)